

당정 “뉴딜 20조 · 지역상품권 15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위한 협의

“코로나 위기, 발상 전환
충분한 재정 필요해
재정건정성美·日보다
양호... 과감하게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재정건정성 우려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기 방역이 중요하다.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의 대전제여서다”라며 “이번에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3단계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때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 조정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

라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방역, 한국판 뉴

딜, 국가 균형발전, 고용안정망,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재정건정성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랩,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톱, 국민안정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는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9조원이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 공급을 15만호까지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청년희망 패키지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 우선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021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법정 기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차의장 “의료인들, 방역 현장과 응급실에 즉각 복귀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들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으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즉각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국민들은 최정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여러분께서 선서한대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룬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의협과 전공의들이 마음을 열고 긴장감을 갖고 대화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 원칙적 법 집행 통해 강력 대처”

문 대통령, “비상 진료로 의료 공백 없게 하라”
김상조 정책실장, 의료 현안대응TF 이끌기로



‘대약’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김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 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엄중 경고는 지난 24일에 이후 이를 만에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렬로 의료계는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 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와 관련해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명령을 포함해 원칙적 대응을 해달라는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장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역시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윤창열 사회수석들이 이끌었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 관례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15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 특권은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각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뉴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2019년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하되,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 기준 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9년 2월 19일 경사노위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10월 11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을 뿐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와 관련, 근로자의 건강 및 산업안전 확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유호상 기자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지라시는 ‘가짜뉴스’”

“국민 신뢰 위반행위”

정부는 2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날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될 것이라는 이른바 ‘지라시’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방역당국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신뢰 위반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

했다.
이날 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대국민 발표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지라시가 나돌았다.
이 지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공포하고 2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금에 대해 발표한다”며 “내외비이며 오전 11시까지 언론배포 금지”라고 되어 있다.
“오늘(26일) 오전 11시에 3단계 발령 여부가 결정된다”는 다른 지라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3대 통신사 중 한 곳에 의견을 물었다”며 “곳곳에서 3단계 준비 들어가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 카드 납부액, 세금까지 한 달 유예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늘부로 3단계 시행을 적용한다는 이런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하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다시 높아졌지만 이면주 감염병 확산 경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방역 현장 근무자 격려

전주시의회 의장단 보건소 방문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26일 무더위 속에서도 전주시 코로나 19 대응 업무로 지친 보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과 이미숙 부의장, 이기동 운영 위원장 등 시의회 의장단은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19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 1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각종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의장단은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더위에 힘들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크나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주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앞으로 2주간을 전국적인 대유행의 중대 기로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에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26일 무더위 속에서도 전주시 코로나 19 대응 업무로 지친 보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서 운영하는 모든 실내·외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허위 사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 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로 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



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대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을 잘못해 혼란을 다시 불러오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